

부자들의 잔치 뒤 설거지를 왜 서민이?

경제학의 제1법칙이란 것이 있다면, 단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진리지만 실제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짜라는 것이 존재하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착각은 여지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져보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이런 성격의 잘못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공짜가 있다는 착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철저하게 합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할 정부도 때때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정부가 선심을 쓰듯 세금 깎아주고 쓸모없는 사업 벌이는 것이 그 좋은 예다. 그와 같은 비합리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감세를 핵심적 정책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감세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조세수입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지적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

감세정책이 조세수입 감소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진실이다. 하늘에서 물래 정부의 공간을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 깎아주면서 어떻게 공간이 더 채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공짜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했다는 뜻이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래퍼곡선’(Laffer curve)의 신화를 맹신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더 걷힌다는 래퍼곡선의 신화는 이미 지적인 사기로 판명된 지 오래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작정 감세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깎아준 세금을 다른 데서 더 거둬 계획 정도는 마련해 놓고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세수입을 종전의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세정책을 밀어붙여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더군다나 정부의 돈 씹씹이는 그 어느 정부보다 훨씬 더 험프니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씹씹이가 너무나 험프다. 한 예로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다고 4대강 정비사업에 수십 조 원이나 되는 돈을 퍼부으려 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서해 바다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라도 한가는 말인가?

지속적으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가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세수입은 줄어드는데 마치 ‘조자룡이 현 칼 쓰듯’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앞날이 어떨 것인지도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 정부는 재임 중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떠났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평가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정부는 세금 더 거둬들일 방법을 찾느라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단순한 귀결조차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책담당자로서의 자질을 의심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뒤늦게 부산을 떠는 모습이 시험 때가 다가오는 데도 태평스럽게 놀기만 하다가 당일치기 한다고 밤을 새우는 학생을 연상케 한다.

나는 또 한 가지 점에서 정부의 뒤늦은 야단법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조세수입 증가 방안이 대체로 중,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성격의 것들이다. 나는 애당초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에 실린 「사이비 이론의 화려한 부활」 참조) 이 부자들의 잔치 뒤 설거지를 왜 중, 저소득층이 떠맡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애당초 내가 감세정책에 반대했던 이유는 결국 중, 소득층이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베풀어진 감세 혜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충당될 리 없다.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중,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판에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인해 불난 데 부채질을 해댄 격이 되었다.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탓에 이런 불상사가 빚어진 것이다.

만약 정부의 호언장담대로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중, 저소득층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경제 활성화로 인해 받은 약간의 혜택과 더 무거워진 조세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듯, 감세정책으로 인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는 여전히 낙관 불허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민의 삶은 한층 더 팍팍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짊어지려고 할 리 없다.

이 세상에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저런 개발사업으로 돈을 뿌려대면 주머니가 두둑해져 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런 돈 잔치를 벌이느라고 부산을 떨어왔다. 그렇지만 즐거움은 잠깐이고 파티가 끝난 후의 숙취는 피할 방법이 없다. 곧 숙취가 닳칠 것을 예상한 정부가 서둘러 세금 더 거둘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는 눈치지만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나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애를 쓰기 전에 쓸모없는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순리라고 믿는다. 정부는 그 동안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방만하게 지출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다. 몇 조 원 정도는 우습다고 생각될 정도로 확장 일변도의 재정기조를 유지해 온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예산을 슬금슬금 얼마나 올려 왔는지 모른다. 이런 방만한 재정기조를 그대로 둔 채 서민들의 조세부담만 늘리면 누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만약 조세수입을 꼭 늘려야 할 상황이라면 서민들의 삶에 더 이상 주름이 가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 정부 들어온 후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완전히 백지화하지 않는 한, 증세는 어차피 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최대한 머리를 짜내 서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가능한 한 작아지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런 노력은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